

# 농식품부, 5년 내 50개국 ODA 확대 협력국 식량안보·韓 농산업 경쟁력 ↑

제1차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 ODA 기반 해외진출 모델 10개 발굴 K-라이스벨트 확대, 쌀 증산 지원 농업 가치사슬 지원 자립 기반 강화 전담 조직 신설해 사업관리 체계화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농업 공적 개발원조(ODA) 협력국 수를 50개국 이상으로 늘리고, ODA에 기반한 국내 기업 해외진출 모델을 10개 이상 발굴 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 같은 국제 농업협력사업을 확대해 협력국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농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제1차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전후방 산업 협력 강화로 사업성과 제고 및 농식품 수출 기반 조성 ▲국제농업협력사업 확충 및 다양화 ▲농업 가치사슬 전주기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사업 추진체계 및 조직 역량 강화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정부와 국제기구·기업·비영리단체 간 협업모델을 10개 이상 발굴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성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ODA 사업과 연계해 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 조사, 전시포 운영, 홍보 등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또 식량원조 및 'K-라이스벨트' 등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에서 참가국 고위 관계자들에서 가루쌀로 만든 전통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농식품부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표 사업들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K-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의 쌀 증산을 위해 한국의 종자와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사업이다. 현재 세네갈, 감비아, 가나, 기니, 카메룬, 우간다, 케냐 등 7개국이 참여했다. 쌀 식량원조 사업은 지원 국가와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 품목도 다양화한다.

이외에도 농업 가치사슬 전반을 분석해 제도 정비, 생산 기반 구축, 가공 및 유통 활성화, 참여 주체 역량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 전주기 기능별 관리를 위해 부처 내 총괄 전담 조직(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을 신설해 사업 기획, 사업 관리, 성과관리, 역량 강화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화·전문화하는 국제농업 협력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정보화·교육, 성과관리 등 분야별 전문 지

원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총괄·기획을 맡는다. 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정보화·교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성과·평가 부문을 이끌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국제농업 협력사업은 협력국의 요청에 따라 분절적, 단발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종합적 지원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한다는 게 목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20주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 온 사업성과를 돌이켜 보고 협력국의 농산업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농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도 함께 지원하는 상생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 국제기구, 민간과 협력해 사업성과를 확산하고 국격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최저

환경부, 연평균 농도 15.6 $\mu\text{g}/\text{m}^3$  기록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15.6 $\mu\text{g}/\text{m}^3$ 을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국 531개 도시 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2015년(25.2 $\mu\text{g}/\text{m}^3$ ) 대비 38.1%, 전년(18.2 $\mu\text{g}/\text{m}^3$ ) 대비 14.3% 감소한 수치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등급별로 분석한 결과, ' 좋음'(일평균 15 $\mu\text{g}/\text{m}^3$  이하)인 날은 212일로 관측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나쁨'(일평균 36 $\mu\text{g}/\text{m}^3$  이상)인 날은 10일로 역대 최소였으며, '매우 나쁨'(일평균 76 $\mu\text{g}/\text{m}^3$  이상)인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2.3~18.9 $\mu\text{g}/\text{m}^3$  범위로 나타났다. 제주와 전남이 12.3 $\mu\text{g}/\text{m}^3$ 로 가장 낮았으며, 강원(12.9 $\mu\text{g}/\text{m}^3$ ), 경남(13.0 $\mu\text{g}/\text{m}^3$ )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5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은 전북으로, 54.8%(35.4→16.0 $\mu\text{g}/\text{m}^3$ ) 감소했다. 이어 전남 50.4%(24.8→12.3 $\mu\text{g}/\text{m}^3$ ), 강원 50.0%(25.8→12.9 $\mu\text{g}/\text{m}^3$ ) 순으로 개선 폭이 컸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국내 정책효과, 국외 유입 감소,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산업 부문은 대기관리구역 내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를 적용해 배출량을 제한했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2020년 400곳에서 지난해 1013곳으로 확대됐다. 또한, 영세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2024년까지 684곳에 보급했다.

수송 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수를 2020년 100만2000대에서 지난해 20만9000대로 79.1% 줄였다. 또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시행해 2023년 97만6000대에서 지난해 82만2000대로 15.8% 감소했다.

생활 부문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지난해 1만7696대 보급했으며, 2017년 이후 누적 148만대를 보급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2020년 8035곳에서 지난해 1만553곳으로 확충했다.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기준 중국 동북부(베이징·톈진·허베이) 초미세먼지 농도는 42.2 $\mu\text{g}/\text{m}^3$ 로 2015년(77 $\mu\text{g}/\text{m}^3$ ) 대비 45.2% 줄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 거제 등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권익위, 소상공인 고충 수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경상남도 거제시와 진주시,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거제시 고현시장 신용협동조합 회의실, 진주시 중앙지하상가 중앙광장, 금산군 금빛시장 청년연구소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주민의 민

원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행사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참여해,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상담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달리는 이동신문고'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 "양자기술 산업 도입 기반 마련한다"

산업부, 양자기술 산업화 포럼 개최 공동 실증 플랫폼 구축 필요성 제기 포럼 상시 운영... 정책 논의 지속 추진

산학연 전문가들이 양자기술 산업화 촉진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양자기술 산업화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양자기술이 제조·물류·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자기술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포럼은 이런 흐름에 발맞춰 양자컴퓨팅,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할 실질적 방안을 논의한다. 또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 인프라, 인력 양성



양자컴퓨터 컨셉트 이미지. /유투이미지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산업계에서 활용 가능한 업종에 특화된 양자 알고리즘 개발 등을 위한 산학연 협력 로드맵이 중점 논의됐다.

이러한 종합토론에서는 △단기 적용 가능한 분야와 장기 투자 필요 분야를 구분한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 △양자 테스트베드 및 공동 실증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맞춤형 연구개발 편성과 제도 정비를 통해 양자

기술이 꿈이 아닌 현실의 기술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 사례와 협업 모델을 지속 발굴해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양자기술을 도입·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포럼 운영을 상시화할 계획이며, 양자기술 산업화 지원정책 마련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한전, 전력망 적기건설 위한 조직개편 단행

"입지 갈등 조기해소에 총력"

한국전력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해 입지 선정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한전은 11일 전력계통본부 산하에 '전력망입지처'를 신설해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전력망확충사업은 전체 사업기간의 60% 이상이 입지 선정과 인허가에 소요되며, 이때부터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자체, 지방의회와의 소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전력망 사업의 성패를 좌우 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다.

국가기간망에 해당하는 345kV 송전선로의 경우 표본 사업기간 9년을 기준으로 입지 선정과 사업 승인에 최소 4~5년이 소요되나, 실제로는 장기간 지연

되는 경우가 다수다.

현재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이하 설비계획)에 따른 신규 전력망 사업의 71%가 입지 선정 또는 사업 준비 단계다. 한전은 작년 5월 제10차 송변전 설비계획에서 기존 전력망 대비 송전선로 약 60%, 변전소 약 40%를 추가 보강하는 대규모 전력망 확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제10차 설비계획의 신규 전력망 사업 대부분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큰 지역의 잉여 전력을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역간 전력연계를 위한 전력망 경과지역을 중심으로 입지선정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한용수 기자